

사회인식 변화 반영...임신부 결정권·태아 생존권 동시 인정

2012년엔 임신 단계와 무관하게 '태아 생명권 보호' 중시 입법 과정 낙태허용 시기 '임신 22주' 내외로 정해질 듯

현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7년 전인 2012년 현재는 현행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반대 의견도 4명이 나와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현재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임신 후 몇 주가 지났는지 생명권 보호의 기준이 대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낙태죄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어서 처벌 규정을 경감하거나 없애면 낙태가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자보건법에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도 일부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쟁점은 2012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은 달랐다. 태아의 생명권이 무조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게 아니라, 임신 기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처를 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임신 후 얼마가 지났는지에 따라 태

아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2012년 합헌 결정 당시 의견을 주장한 소수의견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현재는 의학계 의견을 근거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내외로 봤다. 그러면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여성이 사회·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주변의 상담과 조언을 얻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기를 '결정가능기간'이라고 칭했다. 다만, 현재는 그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2012년 헌재 결정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모든 임신 단계에서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됐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임신 22주 내외를 넘지 않는 동시에 결정가능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선에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중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된 셈이다.

헌재는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언제까지로 할지 ▲결정가능기간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지 ▲상당요건이나 숙려기간 등을 추가할지 등을 입법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뒀다.

현행 낙태죄 처벌 조항에서 낙태 수술과정 중 의료 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며, 비싼 수술비로 인해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 쉽지 않은 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진,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도 헌재가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요인이 됐다.

지금도 모자보건법에서 몇몇 예외 사유를 두고 낙태를 허용하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도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 근거다.

헌재가 이날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린 데에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8.3%였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美 "제재해제 여지"...한미정상 '조기수확' 점점 기대감

폼페이오 "여지 두고 싶다"

문대통령 제재완화 타진할 듯

대북제재 '원칙론'을 고수하던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청와대도 교착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미국이 완고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다면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 등 청와대가 구상 중인 비핵화 방법으로 미국을 설득해 북미 정상을 다시금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이하 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부연했다.

이런 입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최대 압박 기조를 내세우던 미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시점에 맞춰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청와대는 구체적 방법론의 하나로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한두 번의 '연속적 조기 수확'을 제안한 바 있다.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하게 한 뒤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만들어 비핵화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임신 주체 여성 존중" vs "생명 보호 헌법 정신 훼손"...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반대하기 위해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탈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오후 2시 45분께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외쳤다.

헌재 앞에 모여있던 50여명은 "역사는 진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밝은 표정으로 기쁨을 만끽했다. 일부 회원들은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경제개발과 인구 관리를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을 통제·대상화해 그 책임을 전가해온 지난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의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지만, 자기 결정권 보장 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된다"면서 "임신·출산·양육에서 1차적인 주체는 여성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원칙하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간 헌재 앞에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시민 100여명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크게 낙담한 표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며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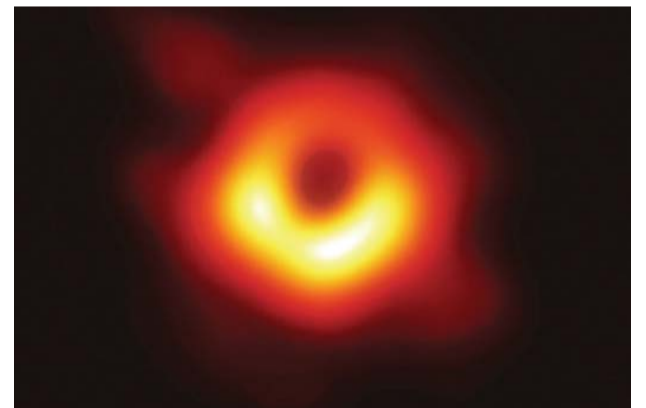
이들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라", "국가는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다. 인간의 생명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며 "낙태를 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블랙홀 실제 사상 첫 관측 성공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 이론 입증

세계 최초로 초대질량 블랙홀 모습이 공개됐다. 국내 천문학자를 포함한 사건지평선망원경(EHT·Event Horizon Telescope) 연구진은 거대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EHT는 블랙홀 영상을 포착하기 위해 국제협력력을 통해 구축한 지구 크기의 거대한 가상 망원경이다. 세계 각지의 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관측 결과는 이날 미국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 특별판에 6편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관련 영상은 체르노지리 은하단 중심부에 존재하는 'M87' 중앙 블랙홀을 보여준다. 학술적으로 블랙홀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 이름처럼 흔히 검은 구멍을 상상하지만, 빛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었다. 그간의 블랙홀 이미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측 모델이다. 사건지평선은 블랙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지대를 뜻한다.



사건지평선망원경(EHT·Event Horizon Telescope) 연구진이 관측한 거대은하 'M87' 중심부 블랙홀. /연합뉴스

EHT 과학자사회 위원장인 네덜란드 래드버드 대 하이노 팔크 교수는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예상한 바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직접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